



국제 농업 정보(2021. 8.): 일본



1 농림수산성 산림·임업 기본계획¹⁾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6월 15일, 산림·임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본 계획은 5년마다 발표함.

- 새로운 기본계획에서는 산림·임업·목재 산업에 의한 녹색성장을 목표로 산림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임업·목재 산업의 지속성을 성장·발전시켜, 2050 탄소중립을 고려한 풍부한 사회·경제를 실현하고자 함.

□ 산림·임업·목재 산업을 통한 녹색성장

■ 기본계획에서는 임업·목재 산업이 가진 지속성을 향상하고 성장·발전시켜 사람들이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사회·경제생활 향상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녹색성장을 실현을 위해 다음의 5가지 정책을 추진함.

- (1. 적절한 산림자원 관리) 산림자원 순환이용을 추진하고, 다양하고 건전한 산림을 유도하기 위해 재조림²⁾ 및 복층림화³⁾를 추진하며, 천연생림⁴⁾보전관리 및 국토강화를 위한 대응을 가속화함. 아울러 간벌·재조림을 통해 산림 이산화탄소 흡수량 확보·강화를 도모함.
- (2. 새로운 임업을 위한 대응 추진) 신기술을 도입하여 벌채부터 재조림·숲가꾸기에 이르기까지 흑자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임업을 추진함. 임업 종사자의 소득과 노동 안전 향상을 도모하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임업 경영체를 육성함.

1) 일본 농림수산성 “森林·林業·木材産業による「グリーン成長」を目指して~新たな「森林・林業基本計画」を決定~”(2021.6.15.)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rinya.maff.go.jp/j/press/kikaku/210615.html>).

2) 인공림을 벌채하고 그 적지에 인공조림을 시행함.

3) 인공갱신에 따라 조성되어 수령, 수고가 다른 수목으로 구성된 산림을 의미함.

4) 재해나 벌채 등에 의해 소실된 후 거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자연적으로 재생된 산림을 말함.



국제 농업 정보(2021. 8.): 일본

- (3.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 목재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국산재 제품의 공급 체제를 정비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중소 지방 공장 등은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다양한 품목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경쟁력을 향상함.
- (4. 도시 등에 '제2 산림' 만들기) 중고층 건축물 및 비주택 분야 등에서 새로운 목재 수요 획득을 목표로 함. 목재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도시에 탄소를 저장하여 온난화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음.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제품의 수출을 촉진함.
- (5. 새로운 산촌 가치 창조) 산촌 지역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 진흥에 더하여, 산림 서비스산업 육성, 관계인구⁵⁾ 확대를 목표로 함.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농림지 관리·이용 등 협동 활동을 촉진함.

□ 새로운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기본계획에서는 산림·임업 기본법에 기반하여 산림의 다원적 기능 발휘 및 임산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목표를 제시함.

정책	주요 내용
산림 다원적 기능 발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계획제도의 운용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벌채 갱신 추진(벌채조림신고제도 재검토와 지도 강화 등) • 우량종묘 생산체제 정비, 정영목 등을 활용한 저비용 조림, 야생동물 대책 등 추진 • 간벌·재조림 추진에 의한 산림 이산화탄소 흡수량 확보 및 강화(간벌 등 특별조치법) • 산림환경 양여세⁶⁾를 활용한 침광혼교림⁷⁾화, 희귀한 산림생태계의 보호 관리 • 국토 강화 5개년 가속화 대책에 근거하여 치산사업(治山事業) 추진 • 재해 발생 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세세한 치산법⁸⁾ 배치, 산림토양 보전 강화, 유목(流木) 대책, 규격구조(structural code)가 높은 임도 정비 추진 • 농림복합적인 소득확보, 활엽수, 버섯 등 지역자원 활용, 농림지 관리 이용 추진 • 산림 서비스산업 추진, 관계인구 확대 • 식수 등 국민 참여 산림 조성 추진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한 임업 경영체 육성 • 생산성 및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임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영목 등을 통한 저비용 조림과 수확 기간 단축 - 자동조작 기계 등을 통한 노동력 절감·노동 강도 완화 • 임업 경영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관리권 설정 등에 의한 장기적인 경영 확보 - 법인화·협업화, 산업복합형 경영체 등 경영 기반 강화 - 경영 플래너 육성 등 경영력 강화 등 • 인재 육성·확보(신규 취업인 지원, 단계적 인재 육성) • 임업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타 산업 수준의 소득, 능력 평가, 노동 안전 대책 강화)

5) 특정 지역 단순 방문자, 거주자는 아니지만 여가·업무·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의미함.

6) 국가가 징수한 국세 중 일부를 특정 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조세를 말함.

7)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여 있는 산림을 의미함.

8) 유역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억제하기 위해 계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장벽으로 사용재료에 따라 돌담, 콘크리트담, 강제(鋼製)담, 통나무담, 돌망태담 등이 있음.



국제 농업 정보(2021. 8.): 일본

정책	주요 내용
임산물 공급 및 이용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목 안정공급(ICT 도입 등을 통한 상물(商物) 분리, 공급망·매니지먼트 추진) •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경쟁력 강화)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KD재, 집성재⁹⁾ 등 저비용공급체제 정비, 공장 간 연계·재편 등을 통한 규모 확대 - (현지 경쟁력 강화) 판재·평각 등 다품목 생산을 위한 시설 교체, 대경재(말구직경 30cm 이상 원목) 활용 - (JAS 제품 공급 촉진) JAS제 생산·이용을 위한 조건 정비, 관계자에 의한 JAS 수수료 수준, 하자보증제도 검토 등 촉진 - (기타) 국산재 비율이 낮은 분야, 가구 등에 이용 촉진 • 도시 등에 목재 이용 촉진(내연성 부재 및 CLT 등 민간 비주택 분야 이용 등) • 목재 등의 수출 촉진,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열전 이용, 자원 지속적인 이용)
국유임야 관리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보전 등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 임산물 지속적·계획적 공급, 국유임야 활용을 통한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 복지 향상 • 상기에 이바지하는 목표로 국유임야 관리 경영추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화(산림클라우드 도입, 목재 ICT 생산유통 관리, 임업 디지털 전환 등) • 코로나 대응(수요 급감 시 생산 조정·조림 전환, 재택근무에 대응한 리폼 수요 반영) • 동일본대지진 부흥·창생,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과 조화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12., 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21¹⁰⁾

-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18일,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21(이하 기본방침)을 발표하였음.
 -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2020.12.21.)에서 제시한 기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정책 패키지 및 개별 정책에 대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함.
-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 및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편,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원격근무를 기회로 인구 이동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등 국민의 의식 및 행동이 변화함.
-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본 기본방침에서는 ① 지역이 자체적으로 특색 및 상황을 고려하여 자주적·주체적으로 대응, ② 도시에서 지방으로 새로운 인구 및 일자리 유입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방문하고 싶고, 지속적으로 살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지역을 실현해 나감.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하며 종합전략에서 제시한 정책체계¹¹⁾를 기반으로 대응을

9) 판재 및 소각재 등을 섬유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접착시켜 만든 접착 가공 목재를 말함.

10) 일본 내각부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21について”(2021.6.1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www.chisou.go.jp/sousei/info/#an20>).

11) (기본 목표) ①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조성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지방과 연계를 구축하여 지방에 새로운 사람 유입을



국제 농업 정보(2021. 8.): 일본

추진하는 데 있어, 새롭게 3가지 관점(사람, 디지털, 그린(친환경))을 중점적으로 지방 창생 대응을 개선하고,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본부를 사령탑으로 정책지표를 확실히 세워 모든 부처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행동이 변화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도시에서 각 지역으로 인구 및 일자리 흐름 창출을 추진함.

-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근무 시행률 급증, △특히 젊은 층의 지방에 대한 관심 증가, △도쿄에서 지방으로 개인·기업 진출 등 변화가 발생함.

■ 이에 따른 각 지역의 특색을 기반으로 자주적·주체적인 대응을 촉진하고자 함.

- △감염병 및 인구감소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화에 관한 관심 고조, △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는 재생 에너지 및 새로운 가치관으로써 지역 창생 SDGs에 대한 관심 고조

- 상기 내용을 기반으로 ❶ 사람(지방으로 사람 유입 창출, 인재 지원), ❷ 디지털화(지방 창생에 이바지하는 디지털 전환 추진), ❸ 그린(지방이 이끄는 탈탄소사회 실현) 관점에서 지방 창생을 추진

□ 사람: 지방으로 인구 유입 창출, 인재 지원

■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구 흐름에 변화가 생겼음.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생활 의식·행동 변화 조사(2021.6.4. 내각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근무 시행률이 상승하여 이에 따라 도쿄권 거주자의 지방 이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방에서 일하기 쉽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이주로 이어지는 인구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

- 이주하는 데 있어 가장 높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일자리 및 수입 확보로 조사되었으며, 원격근무 확대에 따라 직장을 옮기지 않아도 이주가 가능해지면서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디지털화: 지방 창생에 이바지하는 디지털 전환 추진

■ 디지털 전환(DX) 추진을 통해 ❶ 지리적·시간적 제약 요인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 같은 서비스 제공,

만들어 내며, ③ 결혼·출산·육아 실현, ④ 사람이 모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조성 (횡단적 목표) ① 다양한 인재 활약 추진, ② 새로운 세대 흐름 활용 추진



국제 농업 정보(2021. 8.): 일본

②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조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 과제 해결 및 매력 향상으로 연결함.

- 이를 위해 정보통신 기반의 정비 및 인재 지원, 데이터 활용 기반 정비,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함.

□ 그린: 지방이 이끄는 탈탄소사회 실현

■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지방에서 탈탄소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과제 해결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 창생과 탈탄소 선순환’ 추진을 위해 대응함.

- 이를 위해 인재 지원 및 관련 정보공유·민관 협동 추진, 지방 창생 SDGs 추진, 디지털기술 활용, 각 분야 탈탄소화 대응 등을 추진함.

사람	디지털	그린
<p>〈지방 창생 원격근무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 사무실 정비 및 이용 촉진 • 정보 제공·상담 체제 강화 등 <p>〈기업 지방 이전 등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거점강화세제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 정부 기관 이전 추진 등 <p>〈지역으로 인재 지원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창생 인재 지원제도 • 기업판 고향세(인재 파견형) • 전문가 인재 사업 등 <p>〈육아세대 이주 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세대 이주 추진 • 지방공공단체 이주 지원체제 강화 • 결혼·출산·육아하기 좋은 환경 정비 <p>〈관계인구 창출·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인구를 중개하는 민간단체를 모델 사업으로 지원 <p>〈매력 있는 지방대학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과제 및 수요에 대응한 특색 있는 대응 및 조직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검토 • 빛나는 지방대학 만들기 등 	<p>〈5G 등 정보통신기반 조기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기지국 및 광섬유 정비 • 로컬 5G 보급·전개 촉진 <p>〈디지털 분야 인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문 인재 지방공공단체로 파견 <p>〈데이터 활용기반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데이터 활용기반 정비·공개 대응 촉진 • RESAS, V-RESAS 활용 사례 수집, 공유 <p>〈디지털 전환 추진을 통한 지역 과제 해결, 지역 매력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농림수산업, GIGA스쿨 구상, 원격 의료, 자율주행 등 대응 촉진 • 슈퍼시티¹²⁾ 구상 조기 실현 	<p>〈그린 분야 인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 에너지 도입 및 지역활성화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재 지방공공단체로 파견 <p>〈관련 정보 공유 및 민관 협동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탄소에 관한 정보공유 체계 확충 • 지역의 탈탄소화 계획 책정 지원 • 탈탄소사업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주민 서비스 확충을 한 번에 진행하는 민관 협동 대응 추진 <p>〈지방 창생 SDGs 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탄소 관점을 추가한 SDGs 미래 도시 선정 등 <p>〈지역사회·경제를 지탱하는 분야의 탈탄소화 대응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을 기반으로 한 대응(농산어촌의 에너지 지산지소 등) • 정영목(elite tree) 등 이용 확대 • 전기차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수송 시스템 도입, MaaS¹³⁾ 도입 등을 통한 대중교통 편리성 향상 • 비주택·고층건축물 등에 목재 이용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26., 08.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지역 체제를 말함.

13) Mobility as a Service의 약어이며, 모든 교통수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동 최적 방법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함.